

민주, 정치자금 쇄신책 속도... 당내 선거비 투명화 검토

'전대 돈 봉투 의혹' 소속 의원·국민 대상 설문 후 워크숍 난상토론킷-오프 통과 후보자 홍보비 지원 등 여당과 협상 법개정 추진도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몸살을 앓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불법 정치자금 근절을 위한 쇄신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조만간 1박 2일 일정으로 워크숍을 갖고 돈 봉투 의혹 사태의 수습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태에 연루된 윤관석, 이상만 의원이 자진 탈당했으나 여전히 다른 의원들의 연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해소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과 국민을 상대로 심층 설문·여론조사를 병행해 이를 쇄신안 기초 자료로 활용할 생각이다. 원내 지도부와 당 전략위원회

가 공동으로 설문·여론조사 문항을 설계, 보다 정확한 사태 진단과 쇄신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번 설문 여론조사는 철저히 '돈 봉투 사건'에만 초점을 맞춰 진행될 것"이라며 "돈 봉투 사태를 바라보는 민심이 담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 당내 선거비용 제도 미비 때문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전당대회를 비롯한 당내 선거에서 후보자는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데, 후원금 지출에 대한 세부 규정은 없어 '사각지

대'로 방치돼 왔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지난 3일 의원총회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이 문제를 중점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당 대표 경선을 아예 선관위에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인사는 이날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직선거의 경우 후원금을 어떻게 썼는지를 선관위에 신고하게 돼 있는데 당내 선거에선 그런 규정이 없다"며 "선거 운동원들에게 식비와 일비는 제공 여부 등을 자세히 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 대표 경선에서 관리당원에 문자 한 통만 보내려 해도 수천만 원이 든다"며 "중앙당이 컷-오프를 통과한 후보들에게 관리당원을 대상으로 홍보 문자를 몇 차례 보내주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러한 내용을 당

쇄신안의 중심 축으로 삼고, 추후 여당과 협상을 통해 법 개정 추진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돈 봉투 의혹과 관련, 이번 워크숍에서 선제적인 수습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 수사에 휘둘리기보다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는 경우, 자진 탈당을 결의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제적으로 강력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아직 돈 봉투를 수수한 의원들의 이름이 공식화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며 이번 워크숍에서 이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광은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계기로 재차 일고 있는 '돈 봉투 의혹' 자체 진상조사 요구를 지도부가 수용할지는 여전히 안개속이다. 지도부는

앞서 '셀프 조사' 실효성 등의 한계를 들어 내부 조사 계획을 철회했다가 당내 일각의 비판이 이어지자 최근 재검토하겠다고 여지를 줬다.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송영길 전 대표가 자체적으로 당시 캠프 상황을 조사·발표하는 시나리오를 검토했으나 민심의 공감을 얻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워크숍에서 자체 진상조사에 대한 의견을 모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돈 봉투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에 간지 별로 없다"며 "조속히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당내 경선 문제점을 시정하는 쇄신책과 돈 봉투 의혹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수습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전남 김대중재단 발기인대회 김대중 재단은 7일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다목적홀에서 광주·전남 발기인대회를 열었다. 이날 발기인대회에는 권노갑 김대중 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문화상·김원기·임채정 전 국회의장, 정대철 현정희장, 황석영 작가 등 김대중 대통령과 정치 역정을 함께 한 인사들과 지역 발기인 1000여명이 참석했다. <김대중재단 제공>

박광은 "대통령, 대표 먼저 만나는 게 순리"

이재명 대표 "괜찮다" 의사에도 여야 원내대표 회동 다시 거절

더불어민주당 박광은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 문제에 대해 "대통령께서 하루 속히 야당 대표와 먼저 만나 국가 위기의 극복 방안을 논의하시는 것이 순리이고, 순서"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5월 연휴 첫날이었던 지난 5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대통령께서 민생 회복과 정치 복원을 위한 좋은 길을 선택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야당 원내대표만을 만나는 것에 전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괜찮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 만남'이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이 대표는 전날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고(故) 양모 씨를 조문한 뒤 기자들에게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이 여러 사정으로 어렵다면 원내대표와 만나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대표 말씀은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우리 정치가 하루빨리 정상화되길 바라는 충정에서 하신 말씀으로 이해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2일 취임 축하 인사차 박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대통령은 여야 원내대표와 만날 의향이 있다. 여야 원내대표 만남 시 부르면 대통령이 올 수도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당 대표를 먼저 만나는 것이 순서라며 사실상 제안을 거절했다.

배석한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시 기자들에게 "지금은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 만남은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힘 '가상화폐 보유 논란' 김남국 비판

김남국 "법적 이해충돌 없다"

국민의힘은 7일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을 향해 "국민들이 이중성에 분노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에게 모든 것을 걸고 진실개임을 하자고 맞섰지만, 여당은 사흘째 비난 공세를 이어갔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는 채하면서 이재명식 동문서답으로 일관하는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대국민 환장쇼'가 점입가경"이라며 "한동훈(법무부) 장관을 소환하며 '검찰 작풍'이라는 망상

에 가까운 선동에까지 나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국민들은 60억 상당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구멍 난 저가 운동화'를 신는다고 하고, '한 푼 줍쇼'라며 눈물겹게 후원금을 구걸하며 보여준 약자 코스프레의 이중성에 입을 못 다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인을 보유하면서 코인 과세 유예법을 발의하는 이해충돌 문제에 국민들에게 사과조차 없는 뻔뻔함에 분노하고 있다"며 "국민이 궁금해한다면 정령도와 도덕성을 생명으로 하는 청년 정치인 호소인은 대담할 도덕적·정치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역시 이번 사

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당 차원의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남국 의원은 위믹스 코인 80여만개를 지난해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 인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현금화가 아닌 이체"라고 해명했다.

김남국 의원은 7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위믹스를) 현금화한 게 아니라 다른 거래소로 옮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두 실명 계좌만 썼다"며 "당 시에도 거래소 자율규제가 있어 이체할 때 자금출처와 거래내역을 모두 소명해 승인됐다"고 했다.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톨이 시행된 지난해 3월25일 이전부터 실명계좌로만 가상화폐를 거래해왔다는 얘기다. 또 김 의원은 "법률적으로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만약 과세했다라도 (코인이) 폭락해서 혜택을 실질적으로 보는 게 아니었다"고 했다. /연합뉴스

지방정기 라운지

"日 독도 영유권 주장, 주권 침탈이자 내정 간섭"

최정훈 전남도의원

최정훈(민주·독포 4) 전남도의회 의원은 최근 일본측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 "명백한 주권 침탈이자 내정 간섭"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일본은 지난 3월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라고 왜곡하고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허위 날조된 주장을 자행한 뒤 최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청년들의 독도 방문을 놓고서도 '일본 고유 영토'라며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면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원한다면 과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함께 역사



왜곡을 당장 멈춰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퇴행적인 역사의 식과 평화헌법 개정을 통한 군사력의 증강, 노골화된 독도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일본에 대한 정부는 총력도로 맞서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독도와 일제 강제동원 문제 등에 대한 일본 태도에 총력도로 맞서는 게 역사 앞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싼 **임야, 삽니다**
맹지사절. 010-9582-7400

대인동 **상업용지, 매매** 신안동

대인동 - 156평, 매매 - 21억

신안동 - 176평, 매매 - 23억

상업지역, 오피스텔 허가특, 변경가

문의. 010-3605-5000